

제255호 (2010. 4. 19)

■ 건설 경기

· 2월 국내 건설수주 6.7% 감소

■ 정책·경영

· “향후 10년내 주택시장의 구조적 전환점 도래”

· 미래 건설 상품은 ‘녹색과 IT의 융합’

■ 정보 마당

· 독일 통일 이후 건설투자 변화 추이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중소 건설사의 해외 진출과 보증 지원

2월 국내 건설수주 6.7% 감소

- 공공토목 위축과 민간건축 회복 지연으로 한 달 만에 다시 감소 -

■ 공공 수주 23.5% 감소, 민간 수주 14.4% 증가

- 2010년 2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수주가 감소한 가운데 민간수주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한 4조 6,153억원을 기록,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함.
- 공공수주는 토목수주가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전년 동월 대비 23.5% 감소, 두 자릿수 이상 감소했지만 수주액(2조 1,089억원) 자체는 2008년 이전보다 높은 수준임.
 - 공공토목 수주는 연초 재정집행 규모가 작년보다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37.4% 감소한 1조 4,910억원을 기록.
 - 공공건축 수주는 주거용이 부진(-16.3%)했지만 비주거용이 큰 호조세(+134.1%)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65.1%가 증가한 6,179억원을 기록
- 민간수주는 건축수주의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14.4%가 증가한 2조 5,063억원을 기록했는데 예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
 - 민간토목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4.2%가 감소했지만, 2월 수주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 6,110억원을 기록해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됨.
 - 민간건축 수주는 작년 2월 실적이 부진한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0% 증가한 1조 8,953억원을 기록함.
 - 특히, 민간주택 수주는 작년 2월보다 16.4% 증가했으나 수주액 자체는 1조 1,283억원으로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함. 재개발·재건축 수주의 비중이 85%를 차지해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한 민간 주택사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판단됨.

〈2010년 2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09. 2월	4,949.1	2,757.6	2,383.3	374.3	171.8	202.6	2,191.5	637.7	1,553.7	969.5	584.2
2010. 2월	4,615.3	2,108.9	1,491.0	617.9	143.7	474.2	2,506.3	611.0	1,895.3	1,128.3	767.0
증감률	-6.7	-23.5	-37.4	65.1	-16.3	134.1	14.4	-4.2	22.0	16.4	31.3
2009. 1~2월	10,622.7	5,436.5	4,438.9	997.6	542.8	454.8	5,186.3	1,041.7	4,144.5	2,828.7	1,315.8
2010. 1~2월	11,257.9	4,394.8	3,154.9	1,239.9	453.3	786.6	6,863.1	888.5	5,974.6	3,456.9	2,517.7
증감률	6.0	-19.2	-28.9	24.3	-16.5	73.0	32.3	-14.7	44.2	22.2	91.3

주 : 통계청 자료이며, 민간 수주는 국내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 건축공종 중 관공서만 실질적 수주 증가, 토목공종 중 비중 높은 도로와 철도 수주 급감

- 세부 공종별로 건축공종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관공서 수주만 평년 이상의 실적을 보임.
 - 주택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한 1조 2,720억원을 기록. 그러나,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매해 2월 평균 주택 수주액이 2조 2,11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함.
 - 사무실 및 점포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23.6% 증가한 3,027억원으로 역시 평년(2000~2008년 2월 평균 5,043억원)보다 낮은 금액임.
 - 공장 및 창고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55.1% 증가했으나 수주액 자체는 1,562억원으로 평년(2000~2008년 2월 평균 3,087억원)의 절반에 불과함.
 - 관공서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72.0% 증가한 6,696억원을 기록. 예년(2000~2008년 2월 평균 1,824억원)에 비해 대략 3배 정도의 수주가 발생함.
- 토목공종의 경우 치산치수, 항만 및 공항, 기계설치 수주는 호조를 보인 반면, 비중이 높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토지조성 수주는 부진함.
 - 세부 토목공종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로 및 교량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70.8% 급감. 이로써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 철도 및 궤도와 토지조성 수주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5.4%, 67.9% 감소함.
 - 4대강 사업으로 치산치수 수주가 호조(2,076억원, +190.7%)를 보임. 치산치수 수주는 작년 4월부터 호조세를 지속해 9월 이후 꾸준히 2,000억원 이상의 수주를 지속함.
 - 기계설치 수주는 14.0% 증가한 7,182억원으로 지난 1월의 호조세를 이어감.
 - 항만 및 공항 수주는 3,735억원으로 높은 수주액을 기록함. 전체적으로 공공 물량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민자 사업으로 2,000억원 규모의 수주가 발생함.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및 점포	공장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및 교량	철도및 궤도	치산치수	토지조성	항만및 공항	기계설치
2010. 2월	1,272.0	302.7	156.2	669.6	112.6	407.7	117.2	207.6	89.2	373.5	718.2
증감률	11.5	23.6	155.1	72.0	23.4	-70.8	-55.4	190.7	-67.9	336.1	14.0
2010.1~2월	3,910.2	1,412.9	461.9	1,198.4	231.1	812.4	497.3	452.9	171.1	407.3	1,070.5
증감률	13.8	62.8	20.2	43.4	14.3	-232.7	22.3	78.6	-285.1	72.7	20.0

자료 : 통계청

박철한(연구원.igata99@cerik.re.kr)

“향후 10년내 주택시장의 구조적 전환점 도래”

- 투자 수요 감소, 도심 지역에너지 절감주택에 중점 뒀야 -

■ 향후 10년 동안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전환점 도래

- 지난 30년간 한국의 주택·부동산 시장은 경제 및 인구성장이라는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양적 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에 치중하여 왔음.
 - 1970년 79%에 불과하던 주택보급률이 2006년 100%를 달성하였으며 1인당 주거면적, 상하수도 보급률 등 주택의 물리적 환경개선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둠.
 -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 뒤에는 부동산 관련 산업이 개발 중심에 치중되어 유지관리나 금융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지 못함.
 - 또한, 단기간 내 공급 확대라는 시급한 정책과제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의 획일화된 주택을 생산하고 이로 인한 후유증(대규모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투기, 이주민 정주권 박탈 등)을 겪어왔음.
- 향후 10년 한국의 주택·부동산 시장은 저성장, 인구 성장세의 쇠퇴, 양적 주택부족문제의 충족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됨.
 - 인구 및 가구 성장에 의한 주택수요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주택 수요의 핵심 인구층이 40대 이상으로 고령화됨.
 - 주택보유율이 높은 40대 이상의 주택수요는 거주 편의성과 에너지 절감을 추구하는 동시에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부동산의 유동화에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1~2인 가구의 증가, 청년 실업 등의 문제로 인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산업적 발전도 기대됨.
 - 보유 자산의 유동화 선호,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으로 부동산 관련 금융 및 자산운용업의 발전이 예상됨.

■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시장도 위기요인 잠재...선진국과는 다른 행보 예상돼

- 높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등 한국에서도 인구구조와 금융환경의 변화가 도래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선진국에서의 버블 붕괴 현상이 한국에도 도래할지 여부는 지금부터의 시장 대응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소득 증가에 따른 주택구매 및 교체수요증가의 기회가 여전히 존재하며, 적극적인 이민정책 도입이나 남북통일을 통해 인구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에너지·환경 관련 글로벌 공조와 제도변화의 수용, 기술혁신과 산업의 구조변화와 같은 환경변화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임.
- 국내 전문가 그룹 대상으로 향후 민영주택공급측면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설문한 결과, 기능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주택’, 공간적으로는 ‘도심지역’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그린홈, 제로 에너지 홈, 에코 하우스 등 기후 및 환경·에너지와 관련한 건축 상품(주택포함) 개발과 공급에 필요한 기술 및 제도적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향후 10년 동안의 주택 수요는 교외보다는 도심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도심 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함.

■ 변화된 환경에 초점 맞춘 전략 구사 필요, 투자 목적에 기반한 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 고수익 투자 상품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관심이 이미 퇴조하고 있어 앞으로 투자 목적을 겨냥한 무리한 주택사업의 추진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향후 10년 동안에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증대할 전망
 - 그러나 투자나 자산운용 측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
 - 다만, 주거용보다는 토지 및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지고 자본이득보다는 운영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등 구조적인 변화 예상
 - 앞으로의 주택 개발은 거주 지역에 대한 선호와 편의성을 담보로 한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에, 비주거용 부동산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자산으로서의 개발수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김현아(연구위원·hakim@cerik.re.kr)

미래 건설 상품은 ‘녹색과 IT의 융합’

- 2020년도 유망 건설 상품과 기술 예측 -

■ 건설 환경의 변화

- 건설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건설산업의 활동영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래를 대비하는 건설산업은 분야 간 융합을 통한 다방면의 변화를 필요로 함.
- 인구 고령화의 영향과 힘든 일을 기피하는 세대의 반영으로 건설인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천연자원의 고갈 및 중국 등 신흥 이머징 국가들의 급성장에 따른 자원 흡수의 영향으로 원자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요구되는 건설 수요의 유형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설물의 기능들이 통합됨으로써 공간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부각됨.
- 오일머니로 인한 중동시장 확장 등의 영향으로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해외시장 진출과 더불어 국내 건설산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을 따라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건설산업에 있어서도 녹색상품과 녹색기술, 녹색시장으로의 전개가 필요해지고 있음.

■ 미래에 유망한 건설 상품들

- 미래의 건설 상품은 △미래에 등장이 예상되는 새로운 건설시장, △녹색 건설 상품, △분야별 융·복합에 의한 건설상품, △10~20년 내 부각될 사업, △사회적 필요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업, △신사고적 발상에 의한 건설 상품,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건설 상품, △완결성을 갖춘 건설 상품 등의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녹색화 상품(trend driven product)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이 준비할 수 있는 건설 상품들에는 수자원 확보·하천복원, 장수명 공동주택, 에너지 자립형 건축, 초고층 태양열 집진타워, Eco-City, 기가플로트, 부유식 풍력·조력발전소 등이 있음.
- 첨단기술 융합에 의한 상품(technology driven product)
 -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고 건설 상품에 융합시킨 것으로는 주경간 2km 이상의 초장대 교량, 시속 200km 이상의 초고속도로, 해저/하저터널, 대단면/대심도터널, 초고층빌딩, u-City 등이 있음.
- 수요자 요구에 의한 상품(owner driven product)
 - 건설 구조물의 랜드마크적인 특성과 대형 투자 상품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새로운 상품들이 등장. 이들 상품으로는 초고층 빌딩, 장대교량 주탑을 이용한 콤플렉스, 인공섬, 고속도로 복층화 등이 있음.

■ 건설산업의 대응

- 미래 건설 상품은 건설산업에서는 여전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의 개발을 선도하고, 전통적 수익모델에서 탈피한 고부가가치 수익모델을 창출하도록 유도하며, 기술간 융복합에 의한 가치창출을 위한 새로운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미래 건설상품은 수요자들에 의하여 요구되기도 하지만, 건설 주체 스스로 제안하고 완결성을 갖춘 상품으로의 개발을 선도함으로써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간 전문성 확보와 함께 기술간 융합을 위한 폭넓은 시각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함.
- 또한, 다양한 미래 건설사업의 활발한 전개가 가능한 유연성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임.

김우영(연구위원·beladomo@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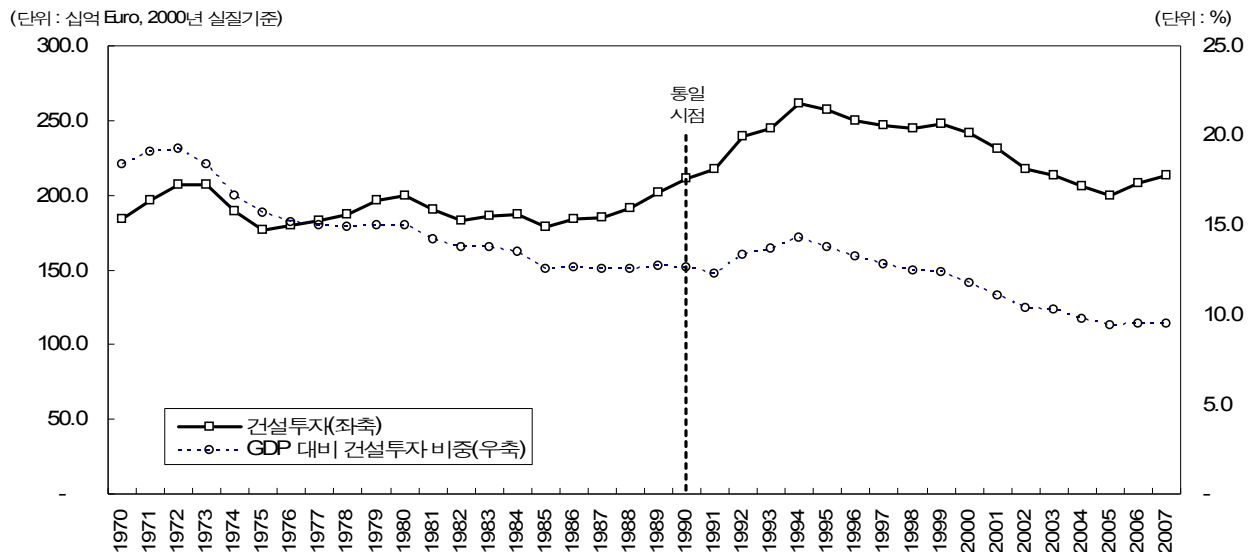
독일 통일 이후 건설투자 증가 추이

- 통독 이후 10년 간 SOC 건설 등 구동독 지역 재건 위한 건설투자 급증 -

■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재건 위한 건설투자 급증

- 1990년 통일이 된 독일은 이후 약 10년 동안 구동독 지역의 재건을 위해 건설투자가 급증했음.
- 독일의 건설투자는 통일 시점인 1990년을 전후해 완만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1992년 이후부터는 통일에 따른 구동독 지역의 SOC 건설과 시설 현대화 등에 투자가 급증했음.
- 199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건설투자는 1994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00년까지 완만히 감소했으며, 2001년 이후부터는 감소세가 확장됨.
- 한편, 통일 이후 구서독 지역 내 건설투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통일로 인한 건설투자 급증은 대부분 구동독 지역에서 이뤄진 것임.
- 결국 통일로 인한 독일 내 건설투자 붐은 1992~2001년까지 약 10년 가까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이후 급감하기 시작한 건설투자는 2003년경에 통일 시점인 1990년 수준으로 하락함.

<독일 건설투자 및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추이>



자료 : OECD

■ 통독으로 인해 1990년 GDP의 20.7%에 해당하는 추가 건설투자 발생

- 통일 이후 동독 재건을 위해 단기간에 건설투자가 급증함.
 - 199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년 뒤인 1994년에 건설투자는 정점을 이뤘는데, 1994년의 건설투자는 통일이 이뤄진 1990년에 비해 23.6% 급증하였고, 1991~94년 기간 동안 건설투자는 연평균 6.4% 성장함.
- 통일로 인해 1992~2001년 사이 총 10년 동안 건설투자가 이전에 비해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 증가한 총 건설투자 증가액 규모는 1990년 건설투자 대비 약 138.8%에 달하는 큰 규모임.
 - 통일로 인해 건설투자가 급증한 1992~2001년 사이 10년 동안 건설투자액에서 통일 당해연도인 1990년의 건설투자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은 총 3,472억 유로(2000년 기준 실질금액)임.
 - 3,472억 유로는 1990년 건설투자 대비 약 164.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1990년 GDP 대비로는 약 20.7%에 해당함.
 - 즉, 독일은 통일로 인해 1992~2001년 사이 10년 동안 1990년 건설투자의 164.1%, GDP의 20.7%에 해당하는 건설투자가 추가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0년 동안 매년 1990년 건설투자의 16.4%, GDP의 2.1%가 추가 투자됨.

■ 교통 인프라 위주의 SOC 건설에 집중 투자, 주택 건설 등에도 역점

- 건설투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구동독 지역의 SOC 건설과 시설의 현대화와 주택 건설 등에 투자가 주로 이뤄졌는데, 특히 교통 인프라 건설에 투자가 집중됨.
 -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고속도로, 철도, 운하 등을 비롯해 동서독을 연결하는 17개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됨.
 - 각 주정부 차원에서도 교통망 개선사업이 일부 이뤄짐.
 - 연방정부 차원에서 1992년 수립된 독일 교통 인프라 확충 장기계획 사업은 주로 통일에 따른 동서독 연계 교통망 확충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약 90%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10%가 추진 중에 있음.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박철한(연구원·igata99@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4.12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주최 EWS지표점검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3월 부동산 시장동향과 지표 점검
4.15	금융감독원	▪거시금융감독포럼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최근 건설사 유동성 위기 부문 등 건설경기 동향에 대한 분석 및 논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주최 공동주택관리제도 관련 회의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 참여 -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관련 법령 개정안 검토 및 맨션관리센터(일본) 도입 방안 등에 대한 검토
	노동부	▪노동부 '건설업 재해 저감 방안' 전문가 간담회에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4.16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주최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관련 리스크 점검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최근 가계 부채 상황 및 주택시장의 현황 진단과 정책적 대응과제 논의
	산업은행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주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동향과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이사철 국회의원·건설협회·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공동 주최 세미나에 주제발표 참여

- 연구원은 4. 12(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사철 국회의원과 건설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PF발 건설금융 위기 재현되는가' 발제를 통하여 최근 건설 및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건설사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 문제점과 건설금융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전환'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4. 28(수), 건설산업비전포럼과 공동으로 강남구 대치동 소재 동부금융센터 대강당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전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 세미나 내용
 - 제1주제 : '건설산업선진화방안 1년의 평가 및 향후과제'(발표자 : 이복남 연구위원)
 - 제2주제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건설산업 선진화과제'(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
 - 종합토론 : 사회-국민대학교 이성우 총장

중소 건설사의 해외 진출과 보증 지원

2009년도 해외건설 수주액 491억 달러 가운데 약 55억 달러는 중소기업이 수주했다. 해외 건설 수주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다. 그러나 2007년 16.8%였던 중소기업 비율이 2008년 14.9%, 2009년 11.2%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자금 동원 능력 또는 금융기관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해외건설 보증 지원이 절실하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국내 건설보증에서 중소기업보증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이 직접 보증 또는 현지 은행의 복보증 형태로 해외건설보증에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공적 수출보증기관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취급 업무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해외 발주처에 대한 직접보증 또는 현지은행에 대한 복보증을 할 수 없다.

두 번째 방안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주는 것인데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이는 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을 확대하려면 현재보다 세밀한 신용평가 및 타당성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수출입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가며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보증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을 특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비율을 수출입은행에 할당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수주금액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비율을 할당하게 되면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밀한 신용평가제도를 구축하고,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체계적인 타당성조사시스템을 갖춰 보증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국내 건설보증 업무를 수행하여 건설보증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에 노하우가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면 중소기업이 해외건설 진출시 받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경제, 2010. 4. >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